

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숙자 운영위원장님!
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영등포구 제2선거구,
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김종길입니다.
본 위원이 발의한 「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
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-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8월 2일 「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
특별조치법안」을 본회의에서 의결, 정부로 이송하였으며,
그 주요내용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~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
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.
- 「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」(이하 ‘25만원
지급법’)의 제안자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형식으로
지원금을 지급하면 가계 소득 증가를 통해 소비가 활성화하고

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제고되어 내수 및 경기를 회복시켜
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.

- 그러나 ‘25만원 지급법’은 제안자들의 주장과 달리,
일시적으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초래해 물가 상승을 불러와
오히려 민생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
급격한 물가상승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
국민경제 운용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입니다.

- 또한 이 법안의 이행을 위해서는 12조 8000억~17조 9000천억 원의
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, 국가채무의 상승을 불러
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큼니다.
2017년 600조 원 대이던 국가채무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걸쳐
2022년 1,000조 원을 넘겼고, 이런 추세가 이어져
2023년에는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(GDP)의 50%를 돌파해
큰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.

- 이런 막대한 국가부채는 저출산에 시달리는 미래세대에게
그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, 나라 빚을 크게 늘리는 것은
현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.

○ 아울러 이 법안은 25만원 지급의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전 국민대상 지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여부와 그 규모 등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로, 이러한 고유사무를 국회가 전 지자체에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

○ 또한 이 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결해야 하지만, 이 과정에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국회가 특별법으로 부당하게 침해하는 초법적인 상황이 초래될 것입니다.

○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‘25만원 지급법’을 재심의할 때 이 법안을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국회에 이를 건의합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